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과 국민보도연맹사건

: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의 절멸 과정에 관한 일고찰*

김태우(서울대학교)

논문 요약

이 글은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의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해외학계의 이론에 주목하며, 1945~1950년 남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타자화·비국민화되어 중국에는 제노사이드라는 방식으로 절멸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 글은 해방직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던 남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제노사이드의 8단계 메커니즘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절멸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 8단계는 ① 낙인과 타자화, ② 내부집단 조직화, ③ 국지적 집단학살, ④ 고립, ⑤ 상징화, ⑥ 감염자 치료, ⑦ 살처분, ⑧ 기억의 압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한국의 사례는 해외사례의 4가지 핵심적 단계적 메커니즘(타자화, 예비적 학살, 전면적 학살, 부정)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기존의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에 관한 해외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대한민국)가 국민의 상당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폭력행위를 나름의 논리로 정당화·합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의 특정집단(공산주의자들)을 타자화·비국민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제노사이드, 국민보도연맹사건, 타자화, 비국민화, 전향, 학살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61-A00017).

I. 머리말

1951년 11월 19일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 의원의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등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해당 문건은 시군읍면별로 조직한 심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엄밀히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도·시민증을 수여”하여 “차별대우를 철폐할 것”을 건의했다.¹⁾

1949년 10월부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도민증’과 ‘국민증’이라는 이름의 주민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1950년 10월부터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증’과 여타 지역민들에 대한 ‘도민증’이 전국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도민증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처럼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명서였다. 그런데 위의 국회 건의안을 통해 추정할 수 있듯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의 구성원들에게는 도민증이나 시민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내의 공식적인 ‘비국민’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이란 단체는 1949년 4월 20일 서울시경 내에서 소규모로 창립된 뒤, 같은 해 6월 5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保導]’는 취지하에 조직된 이승만 정부의 반공 관련단체를 일컫는다. 한국전쟁 이전 시기 이 조직의 구성원 규모는 약 3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는 시·도민증 대신 국민보도연맹원증이 발급되었고, 자유로운 이동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과거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간주된’ 국민보도

1) 국회사무처,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 수정안.” 『국회입시회의속기록』 제11회 제97호, 1951, p. 3.

연맹원들은 1949~50년 당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했던 공식적인 ‘비국민’이었던 것이다.²⁾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속해서 이 비국민들을 집단학살의 방식으로 철저히 절멸시켜 버렸다. 한국전쟁기 소위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는 집단학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이란, 한국전쟁 기간 중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간주된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요시찰인들을 소집·연행·구금 후 집단학살한 사건을 지칭한다. 그 피해자의 수는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살의 과정에서 공산주의 활동과 무관했던 평범한 민간인들이 남로당원과 같은 실제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많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해방 직후 남한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했던 좌익계열 인물들이 불과 5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인적으로 ‘절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다. 전쟁기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경미하게나마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던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 그나마 대학살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공산주의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절대 다수는 생존을 위해 월북을 선택하곤 했다. 그리고 설령 목숨을 부지한 극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지역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북진통일 정책이 압도한 1950년대와 반공주의가 국시(國是)가 된 1960년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거세한 채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기 학살의 결과로 사실상 남한지역 공산주의자들은 인적으로 절멸되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2) 필자가 ‘간주된’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실제 국민보도연맹원의 상당수는 과거 공산주의 활동 경력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산주의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전쟁기에 무차별적으로 학살되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의 절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폭력 발현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폭력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해방5년사의 주요 사건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폭력 자체의 발현 양상에 대한 현상적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법학자 램킨(Raphael Lemkin)에 의해 만들어진 조어로서, 인종이나 종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genos’에 살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2차대전 종전을 전후한 시기에 램킨은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9일 총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는 제노사이드를 “국민·인종·민족·종교 집단 전체 또는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강조는 인용자)로 규정하고 있다.³⁾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개념규정에 따라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대표되는 한국 공산주의자 집단학살사건을 응당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일부를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 내에 고립시켰고, 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신분증(시·도민증)을 발급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차별했으며,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집단희생시켜 버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 특정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3) 라파엘 램킨의 제노사이드 개념의 창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Lemkin, Raphael,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Analysis of Government—Proposals for Redres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44; Lemkin, Raphael, “Genocide.” *American Scholar*, 15(2), 1946; 최호근, 『제노사이드』, 서울: 책세상, 2005, pp. 21~38.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을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볼 경우, 우리는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제노사이드 일반론의 관점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재해석해낼 수 있다. 아마도 이 글은 그 같은 학술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제노사이드를 동기화·추진·정당화하는 전반적인 ‘단계적 메커니즘’에 관한 서구학계의 연구방법론을 참조하여, 한국현대사에서 등장한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한국 국가폭력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레닌과 스탈린 치하의 소련, 히틀러의 나치 독일, 크메르루즈 하의 캄보디아,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내전 등의 제노사이드 사례를 분석한 와이츠(Eric D. Weitz)는 모든 제노사이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제노사이드의 보편적 특징으로서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강조한다.⁴⁾ 이 같은 단계적 메커니즘을 중시한 연구로는 와이츠 외에도 스탠튼(Gregory H. Stanton), 울프(Linda M. Wolf)와 헐시저(Michael R. Hulsizer) 등의 논저를 들 수 있다.⁵⁾ 한국에서는 김상기가 제주4·3사건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⁶⁾ 이들은 제노사이드라는 압도적 폭력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구체적 단계를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타자화나 비인간화가 제노사이드의 강력한 전조(前兆)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요컨대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현대와 미래의 제노사이드를 사전에 경고

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평화학’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또한 그 같은 평화학의 실천성을 기본 문제의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제노사이드에 관한 구체적 사례연구나 역사적 진실규명이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는 절멸적인 국가폭력으로 가기까지의 폭력의 총체적이고 단계적인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연구는 한국 제노사이드의 진행과정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비교·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한국적 사례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 더불어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한국적 사례들을 재해석하며, 그동안 국내학계의 연구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개별적 사실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몇몇 주요 사건들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 논의들

제노사이드의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 논의는 크게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연구와 단계적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연구로 양분될 수 있다. 제노사이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은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심리학 실험으로부터 영향 받은 스타우브(Ervin Staub), 켈만(Herbert Kelman), 해밀턴(Lee Hamilton), 허쉬(Herbert Hirsch) 등의 논저이다. 이들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학살 과정에서 작동한 배제, 일상화, 비인간화, 권위적 문화 등의 구체적 내용을 드러내며, 제노사이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강조했다.⁷⁾ 한국에서는 권귀

4) Weitz, Eric D.,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 14.

5) Stanton, Gregory H., “The Eight Stages of Genocide.” 1998, available online at <www.genocidewatch.org>; Stanton, Gregory H.,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6(2), 2004; Wolf, Linda M. & Michael R. Hulsizer, “Psychosocial roots of genocide: risk,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7(1), 2005.

6)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7) Milgram, Stanley, *Obedience to Authority*. New York: Harper & Row, 1974; Staub, Ervin Staub, *The Roots of Ev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Kelman, Herbert & Lee

숙이 제주4·3사건의 전과정에서 ‘경계짓기’의 중요성을 드러낸 사회심리적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⁸⁾

이상과 같은 제노사이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중시한 연구들은 제노사이드 수행의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특정한 사회심리적 기제’의 발현을 강조한다. 반면에 단계적 메커니즘을 중시한 연구들은 주요 사례 연구를 통해 대량학살이라는 압도적 폭력 상황으로 나아가기까지의 폭력의 상승 과정을 ‘경로 중심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와이즈의 저서는 아마도 사례연구를 통해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고찰한 대표적 연구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와이즈는 레닌과 스탈린 치하의 소련, 나치 독일, 크메르루즈 하의 캄보디아,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전쟁 등의 4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제노사이드의 5단계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그의 제노사이드 5단계 메커니즘의 첫 번째 단계인 ‘권력과 이상향’은 제노사이드 수행 주체인 정치 지도자의 이데올로기적 지향(ideological orientation)을 뜻한다. 두 번째 단계인 ‘주민의 범주화’는 지배세력의 집요한 주민 계층화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인 ‘주민 숙청’은 정치·경제적 반대자들이 억압받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며, 보다 광범한 주민학살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인 ‘최종 숙청’은 차별이나 부분적 학살의 범주를 넘어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제노사이드 정책들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주민 숙청의 의례화’는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까지 잔혹한 제노사이드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와 맥락들, 학살 후의 기억말살과 학살흔적 파괴 과정 등을 보여준다.⁹⁾

스탠톤의 「제노사이드 8단계」 또한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론에

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 알려져 있다. 스탠톤은 르완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자신의 8단계론을 더욱 정교화 했다. 특히 그는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제노사이드 왓치(Genocide Watch)의 설립자이자 위원장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제노사이드를 예방하고 경고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으로 제노사이드 8단계론을 강조해 왔다. 스탠톤은 앞의 단계들이 뒤의 단계들보다 선행하긴 하지만, 선행단계들이 제노사이드의 전반적 진행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스탠톤의 8단계는 분류, 상징화, 비인간화, 조직화, 양극화, 준비, 절멸, 부정으로 나뉜다. 우선 ‘분류(classification)’는 제노사이드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집단을 “우리와 그들(us versus them)”로 구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우리와 상이한 존재로서의 ‘타자’를 설정하는 것이 제노사이드의 첫 단계라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상징화(symbolization)’는 분류된 개별 집단들이 상징화되는 과정을 뜻한다. 각각의 집단들은 노란별과 같은 차별적 표상이나 신분증, 특정한 이름 등을 전통과 법률에 따라 강요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제노사이드라는 죽음의 수용들이 시작되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희생자들은 동물의 명칭으로 불리거나, 질병에 비유된다. 네 번째 단계인 ‘조직화(organization)’는 학살자 집단의 조직화를 뜻하고, 다섯 번째 단계인 ‘양극화(polarization)’는 온건주의자들이 표적으로 설정되어 학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단계인 ‘준비(preparation)’는 제노사이드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시험적 학살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일곱 번째 단계인 ‘절멸(extermiation)’은 법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되는 집단학살 과정을 뜻하며, 마지막 단계인 ‘부정(denial)’은 학살 이후에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⁰⁾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Hirsch, Herbert,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8) 권귀숙, 『기억의 정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9) Weitz, Eric D.,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 14~15.

10) Stanton, Gregory H., “The Eight Stages of Genocide.” 1998, available online at <www.genocidewatch.org>; Stanton, Gregory H.,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6(2), 2004.

스탠튼과 마찬가지로, 린다 울프와 마이클 헐시저 또한 제노사이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단계적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노사이드의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해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론이 모든 집단폭력이나 제노사이드에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상승하는 제노사이드의 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준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중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울프와 헐시저의 7단계는 ① 외부집단(out-group)의 설정과 우월주의의 발흥, ② 특권의 박탈과 낙인, ③ 시민권의 상실과 비인간화, ④ 고립화, ⑤ 인권의 박탈, ⑥ 존재의 상실, ⑦ 부정 등으로 구성된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와이즈, 스탠튼, 울프와 헐시저의 단계론적 접근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르완다, 나치, 소련, 유고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초기 단계로서 한 사회 내의 특정집단을 외부집단으로 설정하고, 부정적 낙인을 찍는 일종의 ‘타자화’ 과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둘째, 위의 연구자들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제노사이드, 즉 타자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총체적 절멸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외부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와 시험적이고 부분적인 학살—와이즈의 ‘주민숙청’, 스탠튼의 ‘준비’, 울프와 헐시저의 ‘인권 박탈’ 단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셋째, 위의 연구자들은 제노사이드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 의한 학살 행위 부정과 정당화 단계가 어김없이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공통점들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제노사이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세계 여타 지역의 제노사이드 사례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단계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본 남한지역 공산주의자들의 절멸 과정

와이즈, 스탠튼, 울프와 헐시저는 각자 나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제노사이드의 보편적이고 세계사적인 특성으로서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구명하고자 했다. 이들이 구명한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현상은 세계의 모든 제노사이드 사건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주요 제노사이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계적 메커니즘은 옹당 한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머리말에 제시했듯이, 실제 한국현대사에도 제노사이드가 존재했다.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간주된’ 약 30만 명에 달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비국민으로 설정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들을 총체적으로 절멸시키고자 한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같은 집단학살 사건은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단순히 1949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의 탄생 과정으로부터 단절적으로 이 사건을 살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구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의 고조와 물리적 공격 및 살해는 이미 1946년경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이 글은 해방 이후에 발생한 대표적 정치·사회적 사건들인 찬반탁논쟁, 10월항쟁,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을 공산주의자라는 불법적 ‘비국민’의 탄생과 절멸 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연속적 사건’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듯이, 위의 사건을 통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비단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로당원과 같은 공산주의 활동 경력과 무관한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의 피학살자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건들의 가해

11) Wolf, Linda M. & Michael R. Hulsizer, "Psychosocial roots of genocide: risk,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7(1), 2005, pp. 114~119.

자들은 공히 학살 희생자들을 국가의 적(敵)인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차별적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했다. 학살 가해자들의 무차별적 폭력 행위는 비국민인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정당한 국가폭력’ 행위로 철저히 합리화되었다. 이 같은 가해자의 인식과 행위는 학살 가해자의 폭력 행위의 단계적 상승과정을 추적하는 본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피학살자군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최소한 국가는 ‘공산주의자’라는 일군의 사람들을 ‘비국민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사 속의 거의 모든 제노사이드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가해자의 ‘타자 만들기’ 과정으로부터 제노사이드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낙인과 타자화(stigmatization and alienation)

해방 후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는 5년도 안 되는 시기에 남한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적대적 존재로 각인되고, 인적으로 절멸되어 가는 과정은 어쩌면 한국사적 맥락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전 사건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의 한국 민중들에 의해 일제에 끝까지 저항했던 항일독립운동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주도 4·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같은 소위 ‘빨갱이’를 향한 대량 학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고, 사회 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1946년 7월 미군정이 서울시민들 8,4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래 한국 정부의 형태와 구조”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자의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10%가 공산주의를 선호하며, 13%의 사람들만이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자의 80%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¹²⁾ 1946년 중순까지

도 서울시민들은 좌익계열의 운동가들이나 체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지니고 있었고, 제국주의 피지배 경험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를 불신했으며, 지주소작제를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간주하고 있었다.¹³⁾

그렇다면 해방 직후 위와 같이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떤 계기들을 통해 대중적으로 부정적 낙인을 받기 시작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대상은 미군정의 좌익 정책일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군은 한반도에 진주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좌익계열의 활동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인민위원회의 무력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다. 1945년 10~11월, 미군정은 이미 전남도인민위원회 습격(10월 31일), 이리와 군산의 인민위원회 습격(11월초), 목포인민위원회 습격(11월 중순), 보성 공산당지부 습격(11월말)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남원에서는 이 같은 습격에 항의하는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어, 미군 발포에 의해 사망자 3명, 부상자 50여 명이 발생하는 소요사태까지 전개되었다.¹⁴⁾

미군정의 한국 좌익세력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1945년 12월 『동아일보』의 오보로 인한 찬반탁 논쟁의 촉발과 1946년 조선정관사 위조지폐 사건 등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전복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직후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자이자 민중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혁명가라는 이미지로 인해 우익계열 정치가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며 민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좌익

12) “Types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 1946. 9. 10. [신복룡 편, 『한국분단자료집』 6, 서울: 원주문화사, 1993, pp. 7~42].

13)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대표적인 우익계열의 정치인인 송진우나 이승만조차도 1945년 12월까지 소련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제시하곤 했다. 『서울신문』 1945년 12월 9일; 1945년 12월 21일 참조.

1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pp. 262~263.

계열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우익정치가들(반탁세력)의 주장은 결국 ‘좌익=친소=찬탁세력=매국노=반민족세력’이라는 등식을 단기간에 만들어냈다.¹⁵⁾ 더불어 1946년 5월 소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조선공산당에게 ‘사기꾼’, ‘경제 파괴범’, ‘건국 파괴범’이라는 최악의 부정적 낙인을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켰다. 실제 당시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정판사 위폐 사건 이후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율이 급락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1946년 9~10월, 조선공산당은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미강경노선으로 전환하여 9월총과업과 10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소위 ‘신전술’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 공산당 간부들에 전격적인 체포령을 내리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였고,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 등 좌익계열 신문들을 정간시켜 버렸다. 이 시점에 이르러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불법단체’로 낙인찍혔고, 모든 공산주의 관련 활동은 사실상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해방 직후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공산주의자들은 1년여의 짧은 기간 만에 민중의 지지를 상당 정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38이남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완전한 ‘타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던 것이다.

2. 내부집단 조직화(organization)

조직화 메커니즘은 특정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가 서서히 내부의 ‘중오집단’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군사단체’를 조직하거나 훈련에 돌입하도록 자극하며, 무장화된 다수의 하부 세력들로 하여금 희생

15)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153~176.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p. 231~243.

자 집단의 많은 사람들을 산발적이지만 점점 더 빠른 빈도수로 살해하도록 만드는 단계를 지칭한다. 더불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선전선동 기관들이 조직화된 지배권력 집단에 의해 접수통제되며, 내부집단의 폭력 행위를 철저히 옹호하기 시작한다.

우선 미군정기부터 한국전쟁 이전 시기까지의 폭력을 독점했던 대표적 집단으로는 ‘경찰’을 손꼽을 수 있다. 경찰의 형성과정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에 의하면, 남한의 국가형성은 좌익과 여타의 반이승만 세력을 폭력적으로 배제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된 집단이 경찰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국가형성 과정에서 경찰은 치안유지라는 고유 업무보다는 우익 주도의 정부수립과 정권의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활동했다.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의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거나 유격대를 토벌한다는 명목 하에 항상 준전시상태를 유지했다.¹⁷⁾

특히 미군정은 해방 직후 80~90%가 도망치거나 숨어버린 일제경찰들을 다시 불러 모아 미군정의 경찰병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민중의 반목을 샀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군정의 통계에 의하면, 1946년 5월에 이르러 경위에서 치안감까지 전체 1,157명의 경찰 관료 중 82%에 달하는 946명이 일제경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다.¹⁸⁾ 이렇듯 일제경찰 출신의 인물들을 고스란히 활용한 군정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좌익계열의 지방인민위원회가 접수운영하고 있던 지방의 행정기관들을 미군정 기구로 강제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미군정 정보장교였던 로빈슨(Richard Robinson)은 당대 경찰의 압도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1946년말부터 남조선이 경찰의 세상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었다.”¹⁹⁾

17) 강해경, “한국 경찰의 형성과 성격: 1945~1953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1.

18) “Minutes of the Tenth Meeting of the Joint American-Korean Conference.” 1946. 11. 5. (강해경, 위의 논문, p. 51에서 재인용).

같은 시기 경찰과 함께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의 무력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추후의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집단학살사건에서 주요 가해자로 활동했던 또 다른 대표적 집단이 우익청년단이다. 우익청년단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경찰 보조기구로 활동하거나 공권력을 매개로 테러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당대 국가폭력의 주요한 하부 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좌익조직을 파괴하고 대중들의 혁명적 열기를 누르기 위해 주로 무차별적인 테러의 방식을 동원했다. 미군정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점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익 청년단 테러를 묵인하거나 적극 동원했다. 우익 청년단의 테러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미군정이 불법적인 테러행위를 점령행정에 이용한 이유는 경찰력의 전국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존재한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²⁰⁾ 실제 우익청년단은 경찰과의 공조 하에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이때 형성된 경찰과의 공식적인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1947년부터는 지방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경찰 및 우익청년단과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학살 가해집단으로는 ‘군’이 있다. 군은 1948년 국가수립 이후 발생한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국가폭력 수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집단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군은 1948년 10월 이후 여순사건 진압과 제주도 초토화작전 수행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한국전쟁기에도 군의 하부조직인 방첩대(CIC)와 헌병대 등이 집단학살의 명령과 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기의 군(국방경비대)은 공식적으로 ‘경찰예비대’라는 제한적 성격을 지녔을 뿐

19) 리차드 로빈슨 지음, 정미옥 옮김, 『미국의 배반: 미군정과 남조선』, 서울: 과학과 사상, 1988, p. 182.

20) 임나영, “1945~1948년 우익 청년단 테러의 전개 양상과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 i.

만 아니라, 미군정에 의해 강제된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군이 반공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학살에 동원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여순사건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 군은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²¹⁾

3. 국지적 집단학살(local mass murder)

1946년 가을, 미군정 하의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한 민중항쟁 진압은 군청소재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대폭 강화시켰다. 군(郡)인민위원회가 군 행정단위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소규모 마을들은 중앙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이 활동할 공간을 찾아서 체제의 관료주의가 덜 미치는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미군정을 비롯한 한국인 우익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읍·면·동 차원에 대항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²²⁾ 앞의 절(내부집단 조직화)에서 거론한 우익청년단의 지방 확장, 즉 경찰과의 공조 하에 지방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간 우익청년단 활동이 194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AP통신의 로이 로버츠(Roy Roberts)는 1947년 8월 미국 정보기관이 매일 평균 5건의 ‘마을’ 단위 좌우익 갈등과 이로 인한 사상자 발생 보고를 경찰로부터 받는다고 기록했다. 예컨대 1947년 8월 19일 마산 인근의 한 작은 읍에서 올라온 전투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약 1천 명의 농민들이 모여 미군정의 미곡수집 계획을 듣다가 흥분하여 투석을 시작했는데, 현장의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하여 4명의 농민이 ‘사망’했다고 한다.²³⁾

2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자세하다. 노영기, “한국군의 이념 변화 : 육군의 ‘반공화’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38호, 2009.

22)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비평, 2004, pp. 306~307.

이렇듯 1946~1947년 10월항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민중항쟁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앞서 와이즈가 주장한 ‘주민 숙청’, 즉 정치·경제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살해하며, 보다 광범한 주민학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의 ‘주민 숙청’이 사실상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한국현대사의 대표적 제노사이드사건 중 하나인 제주43사건 또한 위와 같은 미군정과 지방 정치세력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1947년부터 시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00년대 한국 정부측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또한 43사건의 기점을 제주 민중을 향한 최초의 경찰 발포사건이 발생했던 1947년 3월 1일로 보고 있다.²⁴⁾ 1948~49년 제주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은 고립된 “빨갱이의 섬”에서 벌어진 특수한 광란극이 아니라, 해방 직후 한반도의 폭력적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43사건은 동시기 농촌지역의 “작은 전투”들의 사례와는 달리, 당대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1/10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라는 압도적 희생자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폭력이 광범하게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규모의 국가폭력 사례들—경찰의 시위군중 살해 사건들—과는 명백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폭력은 한국전쟁기를 제외하면 한국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일 정도로 압도적인 폭력 양상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무차별적 대량학살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특정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짚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우리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의 수립기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가 수립을 주도하는

세력은 옹당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상에 걸맞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해내길 원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 수립을 주도했던 세력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국민 정체성의 핵심은 ‘반공’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 같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주도는 국가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인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대한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과 분단 주도세력으로 하여금 강경진압작전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실제 전국적으로는 유일하게 제주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하자, 미군정은 즉각적으로 제주도 초강경진압을 예고했다.²⁵⁾

제주도 강경진압 양상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어, 8월 20일경 응원경찰 800명이 제주도로 증파되었고, 8월 25일에는 최대의 토벌전이 경고되었다.²⁶⁾ 대한민국 정부는 9월 한 달 간 산악지역 토끼몰이식 수색작전에서 사실상 실패한 후, 10월에 이르러 초토화작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실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약 4개월 동안 군경토벌대의 중산간 마을 방화와 무차별적 초토화작전이 전개되어, 전체 민간인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희생되었다.²⁷⁾ 반공국가와 반공국민 형성에서 걸림돌처럼 간주된 제주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화와 학살 행위 속에서 무력화되었다. 국가는 제주도라는 고립된 섬의 지역민 상당수를 ‘비국민’으로 낙인찍은 후, 섬 주민들을 향한 ‘국지적 집단학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23) USAMGIK, “G-2 Weekly Summary No. 103, 1947.8.24.-31.”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pp. 307~308에서 재인용).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2003, p. 536.

25) 위의 책, p. 216.

26)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27) 공식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약 76.5%, 61세 이상 희생자 중 76.6%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 사이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2003, p. 193.

1948년 10월 제주도 상황의 악화 과정에는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반란 사건 또한 적잖은 기여를 했다. 애초 여순사건은 제14연대 일부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었으나, 이내 전남 동부 지역 수개 군의 좌익세력과 지역주민들까지 합세한 대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제 갓 정부를 출범한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려야 할 군의 반란도 충격적이었지만, 지역민들의 대규모 봉기 합세는 적잖은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국가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무차별적 군사작전의 전개와 민간인 학살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시민단체 추정 약 1만 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희생이 발생했다.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²⁸⁾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사건의 발발과 전개를 소련-북한-남한 공산주의자들의 합작품으로 파악했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남한 정부의 적으로 간주했다.²⁹⁾ ‘반공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비국민으로 간주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외부로 추방되고 박멸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1948년 제주도와 전라도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비국민을 향한 (것으로 주장된) ‘국지적 집단학살’은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비국민화’ 과정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절대 정당화·합리화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국가폭력 행위였다.

4. 고립(ghettoization)

2차대전기 나치는 전쟁 발발과 함께 독일 제국을 ‘유대인 없는 나라(judenfreies land)’로 만들려 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게토(ghetto)

였다. 전쟁기 유럽 곳곳에 세워진 게토는 유대인으로부터 독일인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축조된 ‘거대한 감옥’이었다. 독일 점령총독부는 1939년 10월 피요투루크 트리부날스키에 폴란드 내 첫 게토를 설립한 이래 동유럽과 소련 지역에 1천여 곳의 게토를 설립했다. 이 고립된 곳에서 유대인들은 1941년 ‘최종해결’(유럽 내의 모든 유대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까지 철저히 고립되었고, 질병과 폭력으로 서서히 죽어갔다.³⁰⁾ 현대 대도시 내의 빈민 구역, 소수 민족이나 소수 종교집단 등의 고립된 거주지 등을 ‘게토’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2차대전기 게토의 고립성, 차별성, 폭력성 때문일 것이다.

2차대전기 나치가 ‘유대인 없는 나라’를 꿈꾸며 만든 것이 게토였다면,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 없는 나라’를 지향하며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어떤 형식으로도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된 적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신고를 한 후 완전한 대한민국 반공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38이남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을 표현 그대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는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라는 악성 세균에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 전부를 국가의 가시적인 통제권 하에 두고자 했다. 이것이 1949년 대한민국 곳곳에 국민보도연맹이 형성된 이유이다.

1949년 4월 20일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소규모의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다.³¹⁾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지난 6월 5일 시공관에서 개최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는 국민보도연맹의 창립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³²⁾ 흔히 보도연맹은 그 창설 취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산

28)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pp. 40~41.

29) 여순사건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소련 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분규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위의 책, p. 401.

30) 미국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제작 ‘홀로코스트 백과사전’의 ‘게토’ 항목 검색: <http://www.ushmm.org/wlc/ko/article.php?ModuleId=10005059> (검색일: 2015.04.17.).

31)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애국자』 창간호, 1949.10.1, p. 10.

32) 『동아일보』, 1949년 6월 6일.

주의사상을 스스로 버린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포섭기관”으로 알려져 있다.³³⁾ 다시 말해 당시 급증하고 있던 남로당 탈당자와 사상전향자들을 일정하게 수용·교육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반공단체’의 설립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도연맹은 그 취의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전향자 포섭기관이 아니었다. 사실상 보도연맹은 38이남지역 공산주의자들을 전면적으로 ‘색출’하고, 그들을 ‘고립·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절멸’(사상적 절멸을 통한 인적 절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변단체였다. 이 같은 목적의 실행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는 보도연맹 주관 하에 1949년 10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35일 동안 진행된 ‘남로당원 자수 선전 주간’ 행사를 들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보도연맹은 전국적으로 52,182명에 달하는 자수자를 포섭할 수 있었고, 자수주일이 끝난 후에는 전향자 자백서 등에 근거하여 직접 ‘검거’에 나서기도 했다.³⁴⁾ 보도연맹은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전향자의 자발적 신고만을 기다리지 않고, 맹원들의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 ‘색출’에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것처럼, 보도연맹은 그 조직의 구성과정에서 공산주의 활동과 무관했던 다수의 평범한 민간인들을 성과주의적으로 맹원명부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실질적인 조직의 성격을 스스로 흐리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³⁵⁾ 그러나 보도연맹 설립 취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것을 스스로 약속한 사람들, 즉 전향자들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멸사봉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완전한 ‘반공단체’였다. 보도연맹은

이 전향자들을 교육하여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그 조직은 검찰과 경찰이 끊임없이 맹원들을 감시하는 통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조직의 핵심간부들은 모두 정부 관리였고, 실제 그 관리와 운영을 전담했던 이들은 검찰과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간부들이었으며, 간부 중 좌익 전향자 출신은 간사장과 명예간사장 뿐이었던 것이다.³⁶⁾ 그리고 조직의 맹원들은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위험한 비국민 ‘요시찰 대상자’로 구분되었다.

전향자들은 보도연맹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모두 자백하는 ‘양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는 한 양심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보도연맹 가입자의 본적, 주소, 가맹 동기, 현재 심경, 앞으로의 각오, 자기반성, 자기의 주위환경, 가입 권유자 이름 등으로 구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또한 양심서에는 자신이 연루된 좌익 세포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한명도 빠짐없이 적어내도록 했는데, 전향자들은 통상적으로 5~10명의 세포원을 자백했다고 한다. 양심서 내용은 가입 후 1년 동안 검증절차를 거쳤다. 만약 양심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도연맹원은 엄벌에 처해졌다.³⁸⁾ 보도연맹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보도연맹이라는 계도에 고립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5. 상징화(symbolization)

국가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계도에 공산주의 활동 혐의자들을 고립시킨 후, 이들을 특별한 상징체계로 상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앞서

33)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

34) 『조선일보』, 1949년 12월 2일; 『국도신문』, 1949년 12월 6일.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자세하다.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45, 2002.

36) 보도연맹 간사장으로는 박우천(전 민전 중앙위원), 명예간사장으로는 정백(전 근로인민당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동아일보』, 1949년 6월 6일.

37) 『良心譜』(NARA, RG242, Entry 299, Box 767, SA 2009, Item 67).

38)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서울: 푸른역사, 2005, p. 30.

스텐톤은 타자화된 외부집단이 제노사이드로 가는 과정에서 노란별과 같은 표상이나 신분증, 특정한 이름 등을 강요당하는 ‘상징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보도연맹사건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1949년 10월 1일부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도민증’과 ‘국민증’이라는 이름의 주민증이 발급되기 시작했고, 정확히 1년 뒤인 1950년 10월부터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증’과 여타 지역민들에 대한 ‘도민증’이 전국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같은 신분증 발급의 이유는 공산주의자들과 비공산주의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 신문에 의하면, “발악적인 공산도배들의 9월 공세설과 아울러 긴박한 국내정세에 대비하여 전남도에서는 국민증을 발부”하기 시작했고, “경상북도에서는 폭도의 준동이 빈번한 도내 치안 상태에 비추어” 도민증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⁹⁾

이렇듯 도민증의 존재는 주민에 대한 사상 검열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가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경계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민증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에 의하면, 정부는 도민증에 월별 검인난을 마련하여 ‘정기검인’을 통한 사상검열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도민증을 통한 사상검열을 한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주민을 ‘양민(良民)’과 ‘불순분자’로 구분하고, 불순분자에 대한 끊임없는 배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공 국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⁴⁰⁾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의 설립목적과 주요 활동내용에 의하면, 그 구성원들은 성격상 반공단체에 가입된 반공주의적 인물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에 의해서도 감시와 배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 반공 국민에 통합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통제받고 의심받았다. 이들은 반공 국민을 증명하는 시·도민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감시와 차별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보도연맹원증을 발급받았다.

실제 2000년대 진실화해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과거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자신들이 도민증 대신 국민보도연맹 맹원증을 발급받았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 적잖은 감시와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⁴¹⁾ 게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그 차별의 정도가 더 심해져, 시·도민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들은 사실상 통행의 자유나 식량 배급조차 박탈되었다.⁴²⁾ 혹여 전쟁기 대학살의 광풍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도민증의 부재 속에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발발 이전 시기 차별적 상징으로 만들어진 보도연맹원증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기본권 박탈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6. ‘감염자 치료’(treatment of the infected)

20세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의 단계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학살의 피해자로 상정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타자화, 고립화, 시형적 주민학살 등의 단계를 거친 이후엔 어김없이 총체적이고 절멸적인 대학살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공산주의자 대량학살과 절멸 과정에서는 중간에 특이하게도 이들에 대한 ‘전향’과 ‘갱생’의 시도라는 특수한

39) 1949년 경북 도민증 발급 제외 대상에는 그 성격상 국민보도연맹원의 정반대편에 있는 군인과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에 대한 도민증 미발급의 이유는 이미 언급한 신원조치를 거쳐 “확실한”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1949년 9월 8일; 10월 6일.

40)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제136호, 2007, pp. 299~300.

4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p. 44.

42)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제136호, 2007, p. 307.

단계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지적 집단학살 과정에서 ‘비인간화’된 존재들, 상징화 과정에서 ‘비국민’으로 확증된 존재들을 교육과 선전이라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인간화’, ‘국민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타자화된 집단을 오염된 사람들로 간주하는 소위 ‘위생 담론’은 20세기 제노사이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담론 체계 중 하나이다. 학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감염된 자들로 간주하고,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혹은 절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로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곤 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20세기 독일 과학자들의 ‘인종위생’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³⁾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비국민으로 상정된 자들, 즉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치료’를 통한 바이러스(공산주의 사상)의 절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외부집단으로 상정된 공산주의자들을 일종의 감염자로 취급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 내부집단으로 다시 끌어들이고자 했던 조치였다. 이 당시 외부세력을 내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시도는 ‘전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고, 그를 담당하는 기구가 앞서 언급한 국민보도연맹이었다.

원래 전향은 일제시기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상상되고 제도화된 개념으로서, 그와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역사적 실체이다. 전향은 1931년 3월 <일본공산당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처분방침의 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공산당사건의 처리방법으로 개발되었는데, 자수자백하는 자에게 형벌을 면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갱생’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일제의 전향 정책은 같은 시기 나치의 반유대사상과 마찬가지로

상당 정도 위생 담론에 입각해 있기도 했다. 전향의 제도적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그 입법 취지에 대해 “위험한 주의사상을 사람들 마음 속에 침투시키는 ... 과격분자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법으로 해설하고 있다.⁴⁵⁾ 사회의 ‘암세포’를 드러낸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일제는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의 정상인들을 오염·감염시킬 수 있는 불결한 존재, 박멸해야만 하는 존재로 간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전향자들을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정책에 동원하기 위해 사상보국연맹, 조선방공연맹, 대화학과 같은 전향자 관련 조직을 창설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49년 대한민국 또한 국민보도연맹의 창립을 통해 대규모 전향을 시도했다. 보도연맹은 그 설립 취의서를 통해 “사상은 사상으로 투쟁하여 상대방을 극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사상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대중적 토론을 예고했다.⁴⁶⁾ 보도연맹은 창설 직후 10개의 선전조직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남로당의 멸족과괴정책 폭로, 전향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대중 계몽 강연, 형무소 내 정치범에게 전향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치범에 대한 설득과 교육, 대중적 정치 선전 등이 조직의 주요 목표이자 세부 활동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그리고 실제 보도연맹은 간부양성교육, 일반 맹원 교육, 강연과 좌담회, 기관지 『주간 애국자』 편찬 등을 통해 교육과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갔다.⁴⁸⁾

보도연맹의 활동이 공산주의 사상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사상적 박멸)를 목적으로 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탈맹’의 제도화에 있다. 탈맹이란, 보도연맹원들이 교육과 선전을 통해 완전한 대한민국 반공국민으로 거듭났다는 사

43) 김호연, “우생학의 형성과 전개(1860-1945)에 관한 연구: 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 181~222.

44) 전상숙,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제4호, 1997, pp. 70~71.

45)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 41, 173.

46)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

4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p. 39.

48)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 306~315.

실을 공인해주는 절차를 뜻한다. 따라서 보도연맹은 언젠가 이 같은 조직원들의 탈맹의 끝에서 조직의 해체를 보게 될 예정이었다.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은 특이하게도 그 조직의 해체를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로 추구했던 것이다. 보도연맹의 해체는 곧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순결한 반공국민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하게 될 것이었다.

실제 탈맹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 서울에서 일부 실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보도연맹 서울특별시연맹은 1950년 4월 24일부터 탈맹 심사를 시작하여 5월 7일까지 모든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는 이주영, 선우중원, 정희택, 김태철, 신재식과 같은 소위 '사상검사'들이 주도했다. 이 심사의 결과, 6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는 2만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적 탈맹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특별시연맹에서 탈맹한 최종 맹원수는 6,928명에 달했다.⁴⁹⁾ 물론 이들은 탈맹 이후에도 정부의 요시찰명부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지만, 교육과 선전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박멸·청소한다는 위생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었다.

7. 살처분(extermination)

전쟁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다. 북한의 개전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가능성을 전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였다. 기존의 제노사이드 연구들은 전쟁이나 국가수립기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대량학살 위험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이 같은 위기상황의 총괄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공산국가 북한, 그것도 공산주의 모국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오염된 국가' 북한의 침투는 치료의 대상이었던 남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을 순식간에 '내부의 적'으로 돌려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는 자신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자 감염자들의 치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살처분'이라는 물리적 절멸의 방식을 선택했다. 살처분이란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극심한 전염성 질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예방법으로서, 감염동물 및 그와 접촉한 동물, 동일 축사의 동물 등을 죽여서 처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위생 담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자 치료 시도와 그의 폐기, 대량학살을 통한 절멸 시도 등이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처분행위와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신의 통제와 감시 하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 감옥의 정치범, 그 외 요시찰 대상자 등을 매우 신속하게 집단학살하기 시작했다. 학살은 북한군의 진군 속도와 범위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시기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요시찰인 연행과 살해는 한강이남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쟁 발발과 동시에 매우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군경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전쟁발발 직후부터 9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검속하고 집단적으로 학살했다.⁵⁰⁾ 2009년 대한민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발발 후 수복 직전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요시찰인 전체 희생규모는 알 수 없으나,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 정도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⁵¹⁾

실제 전쟁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 색출과 학살은 광범하고 철저했다. 사실상 철저한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국가폭력의 행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했다. 다시 말해 좌익 경력과 무관한 다수의 사람들이 전쟁기에 '빨갱이'라는 비인간화된 정체성의 올라미에 묶여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다. 1950년 9월 중순 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되자 남한지역의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군과 함께 대거 월북했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49) 『국도신문』, 1950년 6월 6일.

5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pp. 160~162.

5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10, p. 304.

이나 월북하지 못한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일부가 지리산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들 또한 한국군의 토벌작전에 의해 철저히 섬멸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표현 그대로 인적으로 ‘절멸’되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라는 비국민을 완전히 청소하고, 완전한 반공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8. 기억의 압살(repression of memories)

역사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제노사이드 발생 이후에는 반드시 가해자에 의한 학살 행위 부정이나 정당화 과정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제노사이드 사건의 가해자들은 학살의 사실을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앞서 스텐튼, 울프, 헐시저 등은 이 같은 과정을 ‘부정(denial)’의 단계라고 표현했다.

한국에서도 학살 이후의 부정과 정당화의 과정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국민을 향한 학살을 지휘했던 국가는 단순한 부정이나 정당화 수준을 넘어, 학살의 기억을 완벽하게 압살하며 소위 ‘극우반공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서중석은 극우반공체제가 “학살을 매개로 하여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극우반공체제는 “학살, 테러, 감옥, 고문, 격리로부터 산출된 공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⁵²⁾ 특히 인위적으로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켰던 전후 1950년대에는 ‘북진통일운동’으로 대표되는 멸공노선 하에 거의 전국민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반공적 대중운동—휴전 반대운동, 중립화통일 반대운동, 제일교포 북송 반대운동 등—에 동원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 같은 광범하고 일상적인 대중시위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공산당을 타도하자”, “공산당의 씨를 말리자”, “공산당을 때려죽이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이 같은 1950년대 멸공적 반공주의의 분위

기 속에서 피학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⁵³⁾

1960년 4·19항쟁은 1950년대 내내 억눌렸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피학살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별·지역별 유족회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유족회(1960.10.20.)가 결성되기도 했다.⁵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진실규명 활동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그것이다.

쿠데타세력은 쿠데타 직후에 발표된 혁명공약을 통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천명했다. 이 말은 재빨리 현실화되었다. 1961년 5월 19일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그날 아침까지 친공·용공분자 93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체포는 지속되었고, 그 안에는 4·19항쟁기의 피학살자 유족회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검거된 유족회 회원들은 최고 사형(이원식 대구유족회 대표)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⁵⁵⁾ 4·19항쟁을 통해 잠시 열렸던 언론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단했고, 사실상 1987년 6월항쟁으로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맞을 때까지 학살의 기억은 철저히 압살당했다.

IV. 맺음말

이 글은 1945~1950년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비국민으로 타자화되고, 궁극에는 인적으로 절멸되는 과정을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이라는

53) 위의 책, pp. 790~791.

5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p. 8.

55)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4, 1962, pp. 189~193.

52)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712~713.

관점에서 조망해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6년 10월 이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된 조직들은 이미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 불법단체로 낙인찍혔고, 군정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한 폭력에 의해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1947년경부터는 지방 곳곳에서 국지적 학살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또한 해방 이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자화’ 과정과 1946~1947년 이래 지방의 무수한 국지적이고 소규모적인 학살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다. 그리고 1949년 한국 정부는 국내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토에 고립시킨 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치유시키고자 했으나, 전쟁 발발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이들을 일제히 살처분시켜 버리고자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의 서구학계의 일반론과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우선 타자화(주민 범주화) → 예비적 학살(주민 숙청, 인권 상실) → 절멸(전면적 학살) → 부정(정당화)이라는 4가지의 핵심적인 단계적 메커니즘이 한국의 사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직후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빠른 시기에 불법적 타자로 낙인찍혔고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숙절없이 ‘처분’되어야만 했다. 기존의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에 관한 주요 연구들은 이들의 관계를 긴밀히 연결하여 보지 않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연구경향은 해방직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자화나 1946~1947년의 지방에서의 국지적 학살사건들이 제노사이드라는 악몽의 현실화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물론 앞서 제시했듯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의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 활동과 무관한 비공산주의자(평범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학살을 명령하고 실행했던 가해자들은 자신

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국민인 ‘빨갱이’ 진압으로 합리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1948년의 집단학살 사건들은 제주도와 전라도 동남부 지역에서 준동한 국지적 ‘빨갱이’ 진압 행위였고,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전쟁이라는 위기 속의 전국적 ‘빨갱이’ 숙청 행위에 불과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실상 ‘국민’의 상당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를 나름의 논리로 정당화·합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국민의 특정집단(공산주의자들)을 타자화하고 비국민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자화와 비국민화 과정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제노사이드에 관한 일반론적 관점에서 한국 제노사이드 사건의 단계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한국만의 특수성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위생정치적 관념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된 사람들을 교육과 선전이라는 방식으로 완치·절멸(사상적 절멸)시키고자 했다. 대규모 ‘전향’이라는 방식을 통한 비국민(공산주의자) 절멸 시도는 제국주의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했던 방식이었고, 국민보도연맹은 이를 현실화시켜줄 환상적 공간이자 악몽과 같은 게토였다. 일제시기와 해방직후에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되었던 사람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어 언젠가 완전한 대한민국 반공국민으로 거듭나길 소망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데, 그들의 바램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는 이들의 상당수를 집단학살의 방식으로 처리해버렸다. 우연히 학살의 광풍으로부터 살아남은 보도연맹원조차 남과 북 어디에도 갖들지 못한 채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해외학계 논저들은 인류사 최악의 폭력현상이 발현되는 양상을 경로 중심으로 살핌으로

써, 미래에 발생 가능한 제노사이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강렬한 ‘평화적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제노사이드 왓치(Genocide Watch)의 주장인 스탠튼의 두 편의 짧은 글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스탠튼의 글은 사실상 학문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엄정한 성격의 글은 아니지만, 특정집단에 대한 타자화와 상징화와 비인간화가 제노사이드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현시대에도 지구 어디에선가 이 같은 현상과 연계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제노사이드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현재성을 각성시키고 있다.

이 글의 궁극적 지향점 또한 스탠튼의 실천적 목적의식과 과히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일베 현상이나 증북 논란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외국인 노동자·동성애자 등과 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양극적인 타자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현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와 타자 사이에 긋는 차가운 경계선은 엄청난 비극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타자를 박멸해야 할 비인간적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제노사이드는 가능성에서 현실로 바뀔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강혜경, “한국 경찰의 형성과 성격: 1945-1953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권귀숙, 『기억의 정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서울: 푸른역사, 2005.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서울: 선인, 2009.
-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제45호, 2002.
-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제136호, 2007.
- 김호연, “우생학의 형성과 전개(1860-1945)에 관한 연구: 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노영기, “한국군의 이념 변화: 육군의 “반공화”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38호, 2009.
- 리차드 로빈슨 지음, 정미옥 옮김, 『미국의 배반: 미군정과 남조선』, 서울: 과학과 사상, 1988.
-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비평, 2004.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_____,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임나영, “1945-1948년 우익 청년단 테러의 전개 양상과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전상숙,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제4호, 1997.
-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200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 _____.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10.
- 최호근, 『제노사이드』, 서울: 책세상, 2005.
- Hirsch, Herbert,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Kelman, Herbert and Lee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Lemkin, Raphael,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Analysis of Government—Proposals for Redres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44.
- _____. “Genocide.” *American Scholar*, 15(2), 1946.
- Milgram, Stanley, *Obedience to Authority*. New York: Harper & Row, 1974.
- Stanton, Gregory H., “The Eight Stages of Genocide.” 1998, available online at <www.genocidewatch.org>
- _____.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6(2), 2004.
- Staub, Ervin, *The Roots of Ev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Weitz, Eric D.,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Wolf, Linda M. and Michael R. Hulsizer, “Psychosocial roots of genocide: risk,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7(1), 2005.

ABSTRACT

Stages of Genocide in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Incident
: A Study on the Extermination Process of Communist in South Korea

Kim, Tae-Wo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extermination concerning communists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from 1945 to 1950.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eory on the universal “stages of genocid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ommunist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were collectively alienated and denationalized and in the end, exterminated by genocide. This study argued that the communists in the southern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gained a strong political influence and public support directly after liberation. The communists, however, soon went through eight stages of genocide and were exterminated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eight stages of genocide are as follows: ① stigmatization and alienation, ② organization ③ local mass murder ④ ghettoization ⑤ symbolization ⑥ treatment of the infected ⑦ extermination ⑧ repression of memories. This case in Korea follows the same pattern as the four stages of genocide (alienation, preliminary extermination, full-scale extermination and denial) shown in cases from other countries. As former research on the stages of genocide equally suggest, the alienation or denationalization of a certain group of people which, in this case, is communists, was pivotal in justifying and legalizing the nation’s use of indiscriminate violence on its people.

Keywords : genocide,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incident, alienation, denationalization, conversion, massacre

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일 : 2015년 07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8월 07일